호남권 '경제 동맹'… 광주~전주 1시간 생활권 시대 연다

2개의 철도 노선, 산단 연결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의 첫 발산단 연결 … '호남 파이' 키워 지역소멸 막고 수도권에 대응

광주시가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한 2개 노선은 광주·전남·전북의 산단 을 연결해 '호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첫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남권 메가시티는 지난해 7월 호남권정책협의 회에서 약속한 실천 방안을 구체화 한 것으로 수도 권에 대응해 '호남권 파이'를 키워 지역소멸을 막자는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간절함에서 나온 동맹안이다. 광주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광역 철도망 구축카드를 마련했다.

◇광주 신산업선=광주시의 서북·광산지역은 국가산업단지 등 산단이 90% 이상이 밀집돼 있고 첨단 전략산업인 AI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중인 곳이지만, 접근성과 교통이 열악하다. 이 때문에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촉진 등의 한계가 발생하고있다. 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광주 신산업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신산업선은광주연구개발특구~광주송정(달빛철도 연결)~빛그린·미래차국가산단~영광(서해안선연결)을 연결하는 일반철도(여객·화물 수송) 노선으로 길이는 44.7km에 달한다.

노선에는 빛그린국가산단과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배치돼 있다. 시는 이들산단을 연결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과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신산업선이 개통되면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도 시철도 1·2호선은 물론 호남고속선(서울~목포), 경전선(광주~순천~부산), 달빛철도(광주~대구), 서해안선(새만금~목포) 등과 전국 사통팔달로 연 결 가능해 물류비용 절감 및 여객수송, 산업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남고속선(서울~목포)은 물론 향후 경전선 (광주~순천~부산), 달빛철도(광주~대구), 서 해안선(새만금~목포) 등 전국단위 철도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물류수송체계를 철 도운송으로 전환해 탄소중립 및 지구온난화, 에너지 위기 등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 생태계

를 조성중인 광주·전남 공동 빛그린·미래차 국가산 단 등 남부권 국가산단과 광주연구개발특구, 영광 의 대마산단, 전북 새만금산단 등을 철도로 연결하 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 조성 할수 있다는 것이다. 산단과 낙후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교통복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

◇광주~전주선= 광주시와 전주시는 호남권 메 가시티의 핵심 도시이지만, 두 도시간의 접점은 도 크마리 오이했다.

이에 광주시는 광주~전주 간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해 광주전주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전주선은 김제(기존 호남선)부터 전주까지 27.8km를 연결하는 것으로 광주~장성~정읍~김제~ 전주를 경유할 수 있다.

또 광주전주선은 일반철도로 여객수송만을 제안 했다. 두 도시를 연결해 문화관광 등 지역 간 교류 활성화로 광주·전남·전북의 호남권 메가시티를 구축 및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광주에 조성중인 복합쇼핑몰 2곳의 입점계획에 따라 인근 도시 연결 철도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후 경전선·달빛철도와 연계성 강화로 철도 이용과 효율성 증대로 이어 질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시 광주전주선이 개통되면 통행시간이 39분 단축(96분→56분)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문화도시, 복합쇼핑몰·스타필드 입점예정), 전주(한옥마을 등관광도시)를 연계하는 체류형 문화관광객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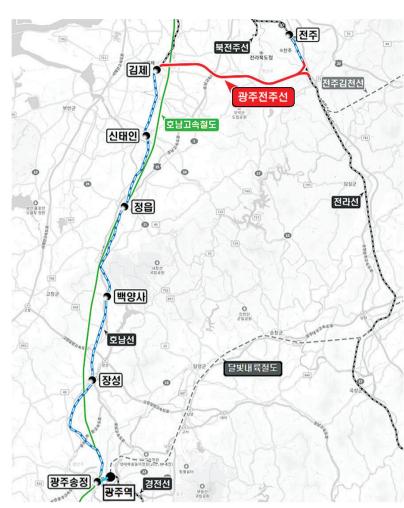
지난 2019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결과 광주와 전주간 평일 유동인구는 1만 123명에 달한다.

한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1차~4차까지 광주시는 총 17개 사업을 요청했고 이중 7개 사업이 반영됐다. 반영된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목포, 경전선 광주~순천,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광주~나주광역철도, 광주~대구달빛내륙 철도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연구개발 특구부터 영광까지 잇는 광주신(新)산업선 노선도.



광주와 전주를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광주전주선 노선도

"호남이 내란 종식·국가대개혁에 앞장서야"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민주 주의 본산인 호남이 내란 종식과 국가대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 자 충장호텔에서 열린 제13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에서 "호남은 늘 민주주의를 지켜 온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만큼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승리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20면〉

그러면서 내란 종식과 정권교체의 핵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력



한 민주 세력의 결집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담양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이 왜 패배했는지 되새기 며 혼을 바쳐야 51대 49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면 서 "호남에서 DJ 지지만

큼 표를 얻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답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를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국가 대개혁이 가능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호남에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 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 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한 것은 내란 연장"이라며 "이 후보자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가오는 조기대선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제안을 꺼내든 것에 대해 "나는 개헌론자다. 하지만 개헌은 내란 청산과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정부에서 시도해야 한다"며 "지금은 개헌으로 내란 종식의 흐름을 분산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종식의 우선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 철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 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예약 • 문의 : 1533-1234

특히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튿날 인 지난 7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 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시민 75%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해야"

광주비상행동 설문조사

광주시민 75%는 내년 지방선거전까지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 은 9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 집에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광주시민 4443명을 대상으로 사회대개혁 시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는 응답자(41.9%)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의 격은 10.2%였다.

대통령 임기에 대한 질문에는 4년 중임제가 56.6%로 가장 많았고, 현행 4년 단임제 37.7%, 잘 모르겠다 5.7% 순이었다.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조 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관계자를 초청했지만, 민주당만 '당내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